

1년새 4차례 검사·정비 이력...전복사고 연관성 파악

‘정보호’ 사고원인 조사 어디에 중점 두나

선체 인양후 합동정밀감식

선주·건조업체 대표 조사 마쳐

항법장치·구명보트 미작동

지난 4일 신안군 임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정보호’의 인양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생존한 3명의 선원들이 기관실 침수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해경은 선체에서 뚜렷한 파공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사고원인이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수사당국이 어느 곳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해경은 7일 오전 언론티빙을 열고 정보호 전복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선체 인양작업 현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수사방향을 밝혔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는 정보호 인양이 완료되면 합동정밀감식을 통해 밝힌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목포해경·서해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선박안전교통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은 인양된 선체에서 물이 빠지면 바로 선체의 기관실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과실 정황이 발견되면 책임자를 인건한다는 것이다.

해경은 생존 선원 3명이 진술한 사고 당시 상황을 토대로 정보호 선주와 선박 건조업체 대표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정보호가 사고 전 4차례에 걸쳐 정비와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건조와 관리 상의 문제가 없었는 지도 조사한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해경조사 결과 한 차례 정비는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한 도색작업이고, 세 차례에 걸친 검사는 진수과정에서 검사를 비롯해 승선인원 확대와 통신키 설비 변경 등의 이유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된 지 1년도 채 안 된 배가 4차례나 검사와 정비를 받았던 점에 미루어 정보호가 설계되거나 건조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실에서 부터 물이 찼다’고 생존 선원들의 진술이 있다는 점에서 선박 스크루 축에서 물이 유입됐거나, 해수가 배로 유입되는 유일한 통로인 ‘씨체

스트(Sea chest)’와 연결된 배관·펌프의 누수 가능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지만 필수 항해통신 장비가 적법하게 설치돼 작동했는지와 구명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사고당시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는 SOS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사고접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24t급인 정보호에는 어선위치 추적장치인 ‘VHF-DSC’와 기존의 선박운항, 조선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선박 또는 육상간 실시간 상호 공유가 가능한 ‘E-NAV’, 그리고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인 ‘AIS’까지 총 세가지 장치가 설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원들이 사고 당시 구명보트가 자동으로 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통발 과적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상 허용된 선적량(통발 3500개)보다 적은 2800여개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통발 과적’이 사고의 주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인양이 완료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신안 해상에서 전복된 24t급 통발어선 정보호가 7일 대형 크레인선에 묶여 안전지대로 옮겨지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광주·전남 경찰직장협 “총경 인사기준 투명하게 공개하라”

20개 경찰서 일동 명의 입장문

올해 상반기 경찰청이 단행한 총경급 인사를 두고 경찰내부에서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직장협)는 “지난 2일 발표된 올 상반기 총경인사는 보복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직장협은 7일 ‘광주·전남 직장협의회 20개 경찰서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사는 경찰

국 신설 관련 여론 수렴 총경회의에 참석한 54명 중 45명이 한직으로 좌천되는 등 문책성 인사”고 주장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들이 복수 직급제 도입으로 늘어난 경정급 직무에 대부분 배치된 점과 112상황팀장 자리에 갓 긴급한 총경이 직무를 맡아오던 관례를 깨고 총경회의에 참석한 시·도 경찰청 과장급 총경들을 배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직장협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낸 총

경들도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면서 “수사권 조정을 이끌어 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이번 인사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경찰협의회 회장단도 “올 상반기 총경 인사는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문책성 인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었다.

경찰 내부에서 보복인사 논란이 확산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든 평가내용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일 뿐 보복인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마약 섞인 소스 친구들 먹인 20대 징역형

광주지법, 징역 2년 징유 3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구입한 마약을 복용하고 지인들에게까지 몰래 먹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4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까지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해 자신이 복용하고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과 SNS를 통해 일명 ‘던지기’(특

정 장소에 숨겨두면 찾아가는) 수법으로 마약과 마약이 포함된 ‘스리러차’ 소스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복용했고, 6월께 집에 놀러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매한 소스를 건네 과자에 뿌려 먹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공택지 ‘벌떼입찰’ 혐의

광주 건설사 대표 등 검찰 송치

공공택지 건설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위장계열사를 대거 입찰시키는 일명 ‘벌떼입찰’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지역 건설사 2곳 중 한 곳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A 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 입찰권 행사는 한 건설사당 하나씩만 행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파도 높아 인양 난항...실종자 수색도 차질

사고해역 18km 해상으로 선체 옮겨

‘정보호’ 전복사고가 나올때 접어들었지만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작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4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기상 악화로 선체 인양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정보호를 사고 해역에서 18km 떨어진 신안군 임자면 대하사도 남동쪽 해상 인근으로 옮겨 인양 작업에 들어갔지만 이날 오후까지 인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교적 물살이 느린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빠른 유속과 너울성 파도가 이어져 인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 인양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하사도 부근에는 ‘부표’ 관측결과 바다의 물결은 0.7m로 일고 바람도 초속 5.7m 수준이었다.

기상 관측값 자체는 인양작업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전남(파고 0.2m)에 비해 물결이 높아졌고 해상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가능성을 감안해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국 구조 당국은 오후 7시 현재 크레인선을 이용해 유속이 느린 곳을 찾아 2km 떨어진 인근 해역으로 정보호를 옮기고 있다. 하지만 이동한 해역에서도 기상여건과 파고와 인양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면 정보호를 목표까지 이동시켜 인양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 작업시 선체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실방지망을 설치했지만 해경은 실종자가 선체 바깥으로 뿔겨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존자 증언에 주변해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가 선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급수선 보조금 여객선에 쓴 진도군 공무원들 처벌 피해

급수선 건조용 국고보조금을 받아 여객선을 건조한 혐의와 고발당한 진도군 전·현직 공무원들이 법적처벌을 피하게 됐다.

7일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진도군 등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송치된 전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A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동진 전 진도군수와 나머지 직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군은 2016년 국토부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건조용 보조금 40억원 중 27억원을 들여 2018년 12월 160t급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여객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이 이중 지급됐다며 국토부에 환수를 통보했고 지인 시민사회단체가 진도군을 고발조치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상가매매 (상무지구.유형적합) (임대가능)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 중심 상업지구
- ▶ 유형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융4억)

(보4천, 월수익 400만)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010-6670-9800

010-2614-9801